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2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집행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 주민들이 독성 화학 물질에 미지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 발표

“소비자의 알 권리법(Consumer Right to Know Act)”으로 지정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을 포함하여 잠재적 위험 화학 물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포장 내 라벨 부착 요건을 개발

본 방안을 발표하는 주지사의 영상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집행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 주민들이 독성 화학 물질에 미지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법(Consumer Right to Know Act)”의 권한으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와 협의하여 지정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을 포함하여 잠재적 위험 화학 물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포장 내 라벨 부착 요건을 제정하는 규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본 방안을 발표하는 주지사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상황은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지정 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포장 내 라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정 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을 수립하는 규정을 개발하며, 라벨을 부착해야 할 1,000 개 이상의 발암 물질과 기타 다른 화학 물질의 목록을 제작하고 새로운 제도에 적용될 소비자 상품의 유형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이전에 확립된 가정용 청소 제품 공개 요건을 뉴욕주에 판매되는 모든 청소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샴푸, 탈취제 및 베이비 파우더와 같은 개인 관리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유사한 공개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요건에 따라 청소 제품과 개인 관리 제품의 제조업체는 특정 제품 성분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C), 보건부(DOH), 국무부(DOS)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잠재적 대책을 모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